세계수영대회 유산 '한국수영진흥센터' 없던 일 되나

시, 소송 등 여파에 재검토
사업 백지화 방안 유력 논의
국비 반납·매몰비용 등 부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산 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백지화 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가 지속 추진, 대안 검토 등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건립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영진흥센터는 국비 106억원을 포함해 353억원을 들여 광주 남부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수영교육, 훈련 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었다.

애초 설계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1순위 업체와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불공정을 주장하며 설계 공모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연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광주시는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열려 있지만, 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 컨설팅, 외부 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소송이 길어지면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남부대 안에 시립 국제수영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 그동안 정부 중앙투자 심사,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선수촌 사용료 소송 등으로 시기를 놓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또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 유산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광주시의 방침 선회에는 소송이 크게 작용했지만, 세계 수영대회를 개최한 민선 7기와 달리 민선 8기 들어 추진 의지가 크게 꺾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리면 국비 반납과 함께 설계 공모 당선 업체와 합의에 필요한 매몰 비용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광주시는 2021년 5억1,000만원, 지난해 24억원, 올해 40억원 등 완공 때까지 국비 10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재작년 예산 중 8,000만원만 집행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국비는 아예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원의 공정성 판단 결과와 별개로 공모에서 당선 확정된 업체에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보상해야 해 추가 분쟁의 소지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외에 200억원 가량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만큼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중복 투자 지적이 지속되고,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센터 내 수영장을 전문 체육시설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생활체육시설로 변경되는 등 상당 부분 의미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총량제' 본격 시행

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제한
공정성 강화…참여기회 확대

전남개발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체계를 확립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2일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 제한은 타 공공기관의 1년간 3~5회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다.

이는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 계약 건수는 2020년 91건, 2021년 113건, 2022년 71건이다.

공사·용역·물품 분야 중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해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계약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현안과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 제공

강 시장 "군공항 특별법 힘모아 달라"

국회의장 등에 지원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강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와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많은 시민이 오랜시간 기다려온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쌍둥이 법으로 추진중인 광주군공항 특별법도 4월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공항 이전사업을 임기 내 매듭 짓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진위·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민 염원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국체전 붐업' 전남도 수도권서 대대적 홍보

서울페스티벌 연계 홍보관 성황

전남도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11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 문을 연 전국체전 홍보관에선 체전 홍보영상 송출, 체전 상징물 전시, 홍보 배너·백드롭 게시 등 풍성한 이벤트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관람객에게는 휴대전화 그립톡, 보조배터리, 칫솔·치약 세트, 방역 마스크, 볼펜 등 홍보 물품을 증정했다.

체전 마스코트 '생명이', '으뜸이'와 무료 촬영 이벤트를 비롯해 즉석 사진 촬영(인생네컷) 서비스는 축제장을 찾은 엠지(MZ) 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관을 찾은 한 축제 관람객은 "전국체전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매우 흥미로웠다"며 "홍보관을 통해 전국체전을 미리 접해 보니 더욱 기대되고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직접 전남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많은 시민이 오가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 전국체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뿌듯했다"며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에서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르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임채민 기자

"윤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실망·우려"

박필순 시의원 "흐름 역행"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이 심각한 기후위기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3)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고 원전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몹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규탄했다.

그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축소는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도 지속 불가능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국제사회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망스러운 정부계획과 달리, 광주시는 전환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강기정 시장은 이번 정부안에 유감을 표시하고 기후위기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담은 민선8기 탄소중립과 RE100 계획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계획 발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